

# 아시아 FTA의 확산과 한국의 전략 : 양자주의의 다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

김치욱  
울산대학교

2012년 5월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2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158,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 아시아 FTA의 확산과 한국의 전략: 양자주의의 다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치욱  
울산대학교

### I. 서론

이 글은 2010년대 아시아의 무역관계는 중첩적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네트워크에 의해 규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으로 양자 FTA를 사실상의 다자주의 레짐으로 바꾸는 일종의 양자적 다자주의(bilateral multilateralism)를 제시한다. 1990년대 경제적 기적과 신화를 차례로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은 2010년대 들어 ‘아시아의 세기’라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다(World Bank 1993; Krugman 1994; Bhagwati 1998; Kohli 2011; Bowring 2011). 국제정치 무대에서 아시아의 귀환은 행위자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보다 가시화되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협력은 향후 아시아 무역질서의 향배를 결정할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후 다자주의 무역질서 하에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에 입각하여 글로벌 공장으로 발돋움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들은 유럽이나 북미 등과는 다르게 역내 무역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다자제도를 수립하지 못하고, 대신 중첩적인 양자 FTA를 통해 자유무역을 관리해왔다. 한마디로 양자주의는 아시아 무역질서와 각국의 통상 정책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부상했다(Heydon and Woolcock 2009).

그런데 글로벌 차원에서 세력전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아시아 무역정치에도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한층 증폭되었다. 그동안 아시아의 FTA 무대에서 주인공은 중국이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중국은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FTA 전략을 추진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인 영향권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반면, 미국은 아시아 FTA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방관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적어도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아시아에 대한 간여정책의 일환으로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그렇다. 그러나 미국의 대 아시아 서진(西進)정책은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TPP협정이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장차 다른 무역협정의 본보기(benchmark)로 기능할 수 있으며, 아태지역의 통합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기반(platform)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Clinton 2011).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FTA 게임의 중심에 놓여 있다. 한-미 FTA는 2007년 서명된 지 5년만인 2012년 3월에 공식 발효되었다. 미국은 이미 호주(2005), 칠레(2006), 싱가포르(2004) 등 3



개 국가와 FTA를 체결(발효)했으나, 동아시아 3대 경제 중 처음으로 한국과 양자 FTA를 최종 성사시켰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FTA 협상의 전단계로서 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쳤으며 2010년 9월 정부 차원에서 국장급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2월 한·중 FTA를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국내절차를 개시했다.<sup>1</sup> 한·중 양국은 한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3자 FTA 협상도 점차 가시화되었다. 3국은 2010년 5월 시작된 산·관·학 FTA 공동연구가 2012년 3월 30일 종료했으며, 2012년 5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 도출될 것으로 점쳐졌다. 한국, 중국, 일본은 2012년 3월 21일 투자 자유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을 교섭 5년 만에 전격 타결함으로써 3자 FTA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같이 2010년대 아시아의 무역 게임은 지역 다자제도의 형성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양자 FTA를 중심으로 속도감을 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글로벌 수준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경쟁, 그리고 한중일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아시아 FTA 게임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자유무역의 이익을 분배하는 국내 경제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기존의 양자 FTA가 사실상의 다자 무역레짐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소위 ‘양자적 다자주의’를 주문하고자 한다. 양자적 다자주의는 무역 거버넌스 아키텍처가 형식상으로는 양자적인 성격을 띠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다자주의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II장은 FTA를 중심으로 짜여진 아시아 무역 거버넌스를 조명한다. III장은 FTA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사회연결망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구조를 밝힌다. 이어 IV장은 한국의 FTA 전략으로서 양자적 다자주의의 필요성과 내용을 밝힌다. V장은 본 연구를 요약하고 양자적 다자주의의 한계점을 논함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 II. 전환기의 아시아 무역 거버넌스

전후 아시아 무역질서의 변천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자주의의 실패와 양자주의의 부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2010년대 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관계는 양자주의에 의해 규율될 전망이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이 양자 FTA 대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수준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와 함께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다자주의를 지향했다(Asian Development Bank 2010).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주도로 아시아의 다자 무역협정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일본 경제학자인 기요시 고지마(小島清)는 1966년 태평양자유무역지대(Pacific Free Trade Area: PAFTA)의 창설을 제안했다. 이 구상은 훗날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PECC)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프로세스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받았다.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PAFTA는 아태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했으며 유럽통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제안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소극성과 중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과 호주는 1967년에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acific Basin Economic Committee: PBEC)를 만들었는데, 양국 간 상업적 협력체로서 제도화의 정도가 떨어지는 민간 경제협력체의 성격을 띠었다. 1970년



대 일중 양자관계가 중요해지고 중국이 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다자협정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잦아들었다(Kojima 1971; Deng 1997). 그러다가 1980년 당시 일본 오히라 수상(大平 正芳)과 호주 프레이저(Malcolm Fraser) 수상의 제안으로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가 수립되어 지역협력의 에너지를 회복했다. PECC는 정부, 재계, 학계 간 3자 포럼으로 정보 교환과 소통을 통해 무역과 개발 이슈에 관한 태평양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에 앞서 1967년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아세안(ASEAN)이 출범했다. 그러나 아세안은 출범 초기 컨센서스 중심의 정치안보 공동체로 인식되었고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1976년 발리 정상회의에서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을 도입했지만, 대상 상품의 범위가 좁고 회원국의 이행의지가 약하여 역내무역에 대한 영향은 미미했다. 이후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 AFTA)을 체결하여 향후 15년 이내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까지 아세안 역내관세율을 0.5퍼센트로 인하하는 동시에 각 회원국의 비관세장벽도 점차로 철폐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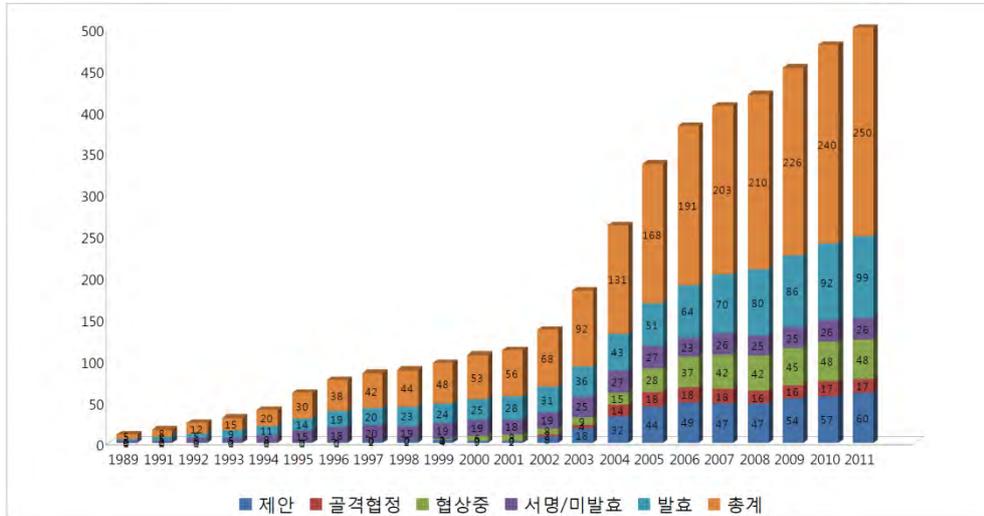
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포괄적인 다자 무역레짐을 향한 노력은 1989년 APEC의 수립으로 가시화되었다. 1993년 미국에서 개최된 1차 APEC 정상회의는 단일시장의 건설이라는 비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에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를 설정한 ‘보고르 목표’를 채택했다. 1단계로 APEC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의 경우 2010년까지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2단계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멕시코 등 나머지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자유화에 동참토록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후 연례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경제통합을 심화하는 각종 행동계획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2011년 현재 APEC은 여전히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APEC 2011).

아시아 지역에서 다자 무역협정의 공백은 양자 FTA에 의해 채워졌다. [그림 1]과 같이 아시아 국가들은 2011년 현재 250개의 FTA를 이미 체결했거나 협상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FTA의 태반은 양자 협정인데, 1990년 3개에서 170여개로 급증, 전체 FTA의 6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의 양자주의는 역내 다자주의 틀인 APEC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유럽과 북미의 지역주의가 확산되는데 대한 방어적 성격이 짙다. 아시아 밖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유럽연합, 미국, 일부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양자 FTA 확산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였다. 1992년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제외하면 2000년 이전에 양자 혹은 복수국간(plurilateral)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없었다. 일본과 한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도 여전히 다자주의를 지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중 양자 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WTO 협상이 지체되고 APEC이 동력을 잃어감에 따라 점차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 1999년 칠레 FTA 협상을 개시했고, 일본과도 준정부간 수준에서 FTA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싱가포르가 FTA 카드를 제시했을 때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2002년 서명했다. 이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의 역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FTA 협상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림 1] 아시아 FTA 현황



출처: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Database

이런 가운데 중국이 2001년 11월에 아세안에게 2010년까지 FTA를 체결하자고 제안한 이후 양자주의의 파고가 더욱 높아졌다. 중국은 2003년 조기수확(early harvest) 프로그램으로 태국을 필두로 한 일부 아세안 국가들에게 농산물 무역을 개방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을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체결했다. 중국의 대 아세안 FTA 제안이 두 달이 채 안되어 고이즈미(小泉 純一郎) 수상이 아세안을 방문하여 FTA를 포함하는 일-아세안 포괄경제협정을 제안했다. 일본은 2002년에 먼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접근하여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부문을 포괄하는 양자 FTA를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FTA들이 선례로 축적됨으로써 장차 중국을 포함하는 지역 무역협정의 디딤돌이 되길 원했다. 2005년 중반 일본은 태국, 말레이시아와 협상을 타결한 뒤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개시했다. 일본이 아세안 회원국들과 체결한 양자 FTA는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부문보다는 투자와 서비스 영역에서 더 성공적이었다. 한국은 2004년 말 아세안에 접근하여 2006년 중반에 FTA에 서명했다.<sup>2</sup>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 시선을 돌렸고 2007년 3월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뿐만 아니라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광범위한 무역 상대국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미국도 전후 다자적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창설자이자 강력한 지지자였지만,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양자 및 지역차원의 FTA가 확산되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2001년 국제무역입법아젠다(International Trade Legislative Agenda)는 “현재 세계에 130여개의 특혜무역협정(PTA)이 있지만,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졸릭(Robert Zoellick) USTR 대사도 서반구에 30개의 FTA가 있지만 미국은 단지 한 개의 FTA에만 속해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은 2001년까지 3개의 FTA(이스라엘, 캐나다, NAFTA)를 체결했으나, 이후 호주, 바레인, 오만, 요르단, 중미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AFTA) 5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도미니카, 콜롬비아, 칠레, 파나마, 싱가포르(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모로코, 남아프리카관세동맹(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랜드) 등과 FTA를 체결했다. 또한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중동자유무역지대구상(Middle East Free Trade Area Initiative), 아세안 국가와는 아세안행동계획(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적극성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말기부터 환태평양파트너십(TPP)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손열 2011, 39-65). TPP는 2002년 10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소위 태평양 3개국(Pacific Three: P3) 국가를 중심으로 출발, 2006년 브루나이가 참여하는 4개국 간 자유무역협정(P4)으로 확대되었다. P4는 아시아, 태평양, 남미를 잇는 최초의 다자 자유무역 협정이다(Lewis 2011, 27-52).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2008년 9월22일 수잔 슈워브(Susan Schwab) 명의로 P4 회원국을 상대로 한 TPP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sup>3</sup>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14일 일본 산토리(Suntory Hall) 연설을 통해 TPP 협상 참여의사를 재확인하고 TPP를 포괄적인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추진하여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Obama 2009).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태평양 세기’를 떠받치는 6개 기둥 중 하나로 TPP와 APEC 같은 다자 지역제도에의 참여를 꼽았다(Clinton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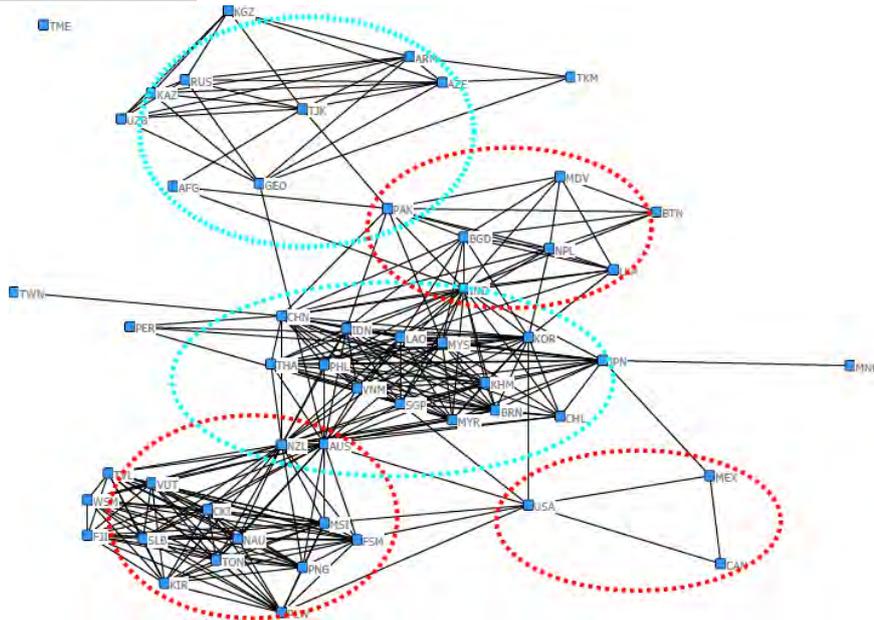
요컨대, 아시아 무역 거버넌스는 다자협정 대신에 점차 양자 FTA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이뤄져 왔다. 아세안은 아시아 FTA의 중심 무대를 유지하고 지역통합의 표준 설정자로 남기 위해 여러 국가들에게 FTA를 제안했다. 중국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영향권을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아세안에 대해 적극적인 FTA 공세를 펼쳤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을 따라잡고 역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FTA 외교에 가담했다. 미국도 아시아 FTA 정치에 대해 더 이상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서의 귀환을 재촉했다.

### III.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구조

이 장에서는 아시아 무역관계가 양자 FTA 네트워크에 의해 규율되는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본다(김치욱 2012, 161-190). FTA 네트워크의 구조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느 국가의 영향력이 전체 FTA 네트워크 속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Grewal 2008). 여기에서는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네트워크의 구도와 밀도, 네트워크 속에서 각 행위자의 위치권력을 의미하는 클러스터 계수, 구조공백, 중심성, 그리고 네트워크 내에 형성된 또 다른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하부구조 등을 검토한다. 분석대상은 2011년 현재 아태지역 국가들의 FTA다. 표본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48개 역내 회원국과 APEC의 21개 회원국 등 총 53개국이다. FTA의 진행 단계에 따라 두 종류의 표본을 구성했는데, 이미 서명된 FTA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A)과 협상·연구 중인 FTA까지 포괄하는 표본(B)이다.<sup>4</sup> 이처럼 상이한 표본을 만드는 이유는 2010년대 아시아 FTA 정치에서 주요 국가의 상대적 지위의 변화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이나 중국이 선점해온 아시아의 통합 노력에 상대적으로 뒤늦게 가담했다. 미국의 대 아시아 FTA 정책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TPP는 아직 협상 단계에 있으며, 아시아 FTA 정치의 윤곽은 TPP의 진행과정에 따라 구체화될 것이다. 따라서 TPP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2010년대 아시아 FTA 게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2] 아시아 FTA 네트워크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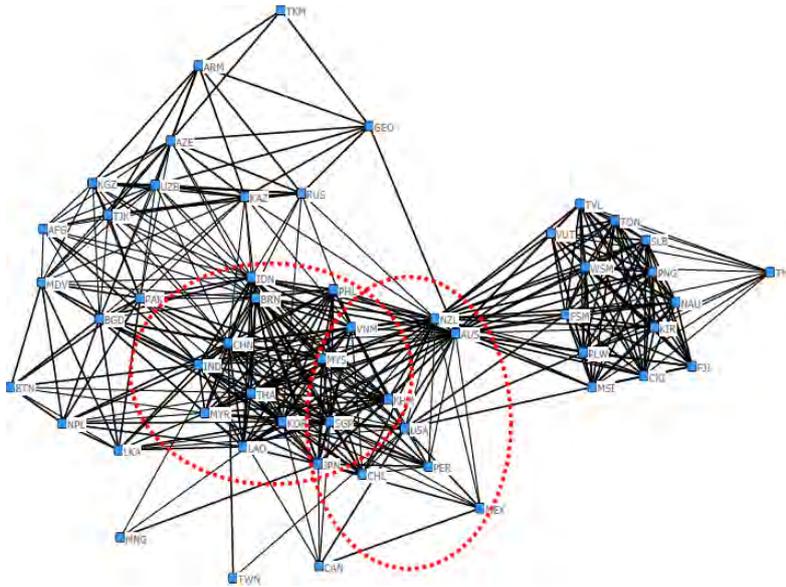


[그림 2]는 이미 체결된 FTA만을 고려한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구조(configuration)를 보여준다. 전체 53개국 중 동티모르를 제외한 52개국이 FTA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적으로 비교적 뚜렷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네트워크의 중앙 부분에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아시아 네트워크가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이 포함된 북미 네트워크, 러시아와 구소련 국가들로 이뤄진 중앙아시아 네트워크, 인도양 연안 국가들로 구성된 서남아시아 네트워크, 그리고 남태평양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각 권역을 연결해주는 매개 국가도 식별해 낼 수 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는 동아시아와 남태평양을 이어준다. 중앙아시아 네트워크는 그루지아와 파키스탄을 매개로 외부에 연결돼 있다. 인도의 경우 동아시아 권역과 서남아시아 권역을 매개하고 있다.

[그림 3]은 TPP 등 현재 협상중인 FTA를 포함할 경우의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다. 우선 [그림 2]에 비해서 지역적인 권역이 약화되었다. 남태평양 네트워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네트워크 서로 중첩되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이러한 네트워크 간 중첩성은 미국의 위치가 중국과 아세안 중심의 동아시아 네트워크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TPP 협상에 임하고 있는 국가를 별도로 표시하면 중국 FTA 네트워크와 미국 FTA 네트워크가 서로 겹치게 되어 두 네트워크 간에 경쟁이 진행될 것임 짐작하게 한다. 미국 네트워크가 미주대륙과 남태평양을 배후지로 하면서 동아시아로 서진하고 있는 형세다. FTA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는 협상·연구 중인 FTA까지 감안할 경우 22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이는 전체 53개 표본 국가 간의 맺어질 수 있는 FTA의 최대 4분의 1 이상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 연결 고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그림 3] 아시아 FTA 네트워크 II



이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4개국의 네트워크 내 상대적 위치를 알아보자. 네트워크 속에서 각 노드가 이웃 노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인 클러스터 계수(clustering coefficient)를 보면, 아시아 FTA 네트워크 전체로 보면 표본B의 클러스터 정도가 당초 0.789에서 0.768로 작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네트워크의 전체 구도를 나타낸 [그림 2]와 [그림 3]에서 각 권역이 서로 융합되고 있는 모습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최대의 패자는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클러스터 계수는 표본A의 0.547로부터 표본B의 0.508로 감소한다. 반면, 미국(0.286 → 0.468), 일본(0.571 → 0.716), 한국(0.575 → 0.587)의 응집력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의 TPP와 다른 FTA 협상들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미국, 한국, 일본의 네트워크 응집도는 증가하지만, 중국의 응집도는 반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지표

표본	지표	전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A	클러스터 계수	0.789	0.286	0.547	0.571	0.575		
	구조공백 지수	-	6.0	9.6	7.0	8.2		
	중심성	연결	집중도	27.4 퍼센트	8.0	20.0	15.0	18.0
		근접 (도달률)		-	163 (0.71)	149 (0.73)	170 (0.54)	164 (0.60)
		매개		28.1 퍼센트	89.7	98.1	80.7	42.9
B	클러스터 계수	0.768	0.468	0.508	0.716	0.587		
	구조공백 지수	-	12.6	15.4	7.7	12.1		
	중심성	연결	집중도	30.7 퍼센트	14.0	24.0	17.5	21.5
		근접 (도달률)		41.3 퍼센트	86 (0.96)	78 (0.96)	87 (0.94)	81 (0.96)
		매개		18.5 퍼센트	72.7	94.3	20.6	46.5



네트워크의 유효 크기(effective size of network)로 측정된 구조공백(structural hole) 지수의 경우,<sup>7</sup> 4개국 모두 표본B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중국 FTA 네트워크의 유효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크기의 증가폭은 미국(+6.6)이 중국(+5.8), 한국(+3.9), 일본(+0.7)을 앞질렀다. 그 결과 미국 네트워크의 안정성은 4개국 중 최하위에서 2위로 상승했으며, 그만큼 미중간의 격차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상대적 중요도 혹은 위치권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중심성(centrality) 지표를 살펴보자.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네트워크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연결된 관계의 숫자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함으로써 발휘하게 되는 힘이다(김상배 2011, 5-40). 기술적으로 노드가 맺은 링크의 총수를 말한다. 전체적으로 표본B에서 표본A보다 전체 링크의 수가 증가하지만, 중국(24), 한국(21.5), 일본(17.5), 미국(14) 순으로 더 높은 중심성을 갖게 된다. 양 표본에서 연결중심성의 집중도(centralization)가 27.4퍼센트에서 30.7퍼센트로 증가했는데, 이는 표본B에서 네트워크 내 중심성의 편중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또 다른 중심성 지표인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노드 간 관계의 강도와 거리를 고려한다. 연결중심성이 노드 간 관계의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 것과 대조된다. 링크가 많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노드 간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근접중심성이란 네트워크상에서 행위자와 행위자 간의 거리를 가능한 한 가깝게 함으로써 발휘되는 중심성이다. 기술적으로 근접중심성은 노드 간 경로의 거리(path distance)로써 측정하는 법과, 일정한 수의 단계를 거쳤을 때 얼마나 많은 행위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도달률(reachability)을 이용하는 법이 있다. 이 중 경로거리로 측정된 근접중심성은 두 표본에서 중국이 가장 짧고 일본이 가장 길었다. 하지만 도달률로 본 근접중심성은 4개국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두 단계를 거쳤을 때 표본A에서 미국 71퍼센트, 중국 73퍼센트, 한국 60퍼센트, 일본 54퍼센트로 편차가 비교적 큰 도달률을 보였는데, 표본B에서는 모두 94-96퍼센트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네트워크 밀도가 증가한 자연스런 결과로 해석된다.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네트워크상에서 어느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사이에 놓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단절될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여전히 매개중심성에 있어서도 중국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네트워크 밀도가 증가한 표본B에서 미국의 매개중심성은 89.7에서 72.7로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98.1에서 94.3으로 줄었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다. 일본의 매개중심성은 80.7에서 20.6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42.9에서 46.5로 4개국 중 유일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한국의 매개 권력도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아시아 FTA 네트워크 안에 별도로 식별 가능한 하위구조(substructure)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서로 다른 FTA 네트워크의 존재유무를 판단하려 할 때 몇 가지 구분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sup>8</sup> [표 2]는 하위집단법(clique)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위구조의 구성국을 식별했다. 미국과 중국은 동일한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았다. 미국의 네트워크는 호주, 캐나다, 멕시코, 남태평양 국가를 포함했다. 중국의 네트워크는 일부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구성원으로 했다.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 등 두 표본 모두에서 양국의 네트워크에 속했다. 이는 현 상태에서도 한국은 미국 FTA네트워크와 중국 FTA네트워크를 매개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뜻한다. 표본B에서는 호주, 칠레, 뉴질랜드 등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FTA 네트워크 간의 매개자로 새롭게 등장했다.



[표 2]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하위구조

표 본	미국 네트워크	공동 구성원	중국 네트워크
A	AUS CAN FSM MEX MSI PLW	KOR SGP	BGD CHL IND IDN KHM LAO LKA MYR MYS NPL NZL PAK PER PHL THA VNM
B	CAN FSM MEX MSI PER PLW	AUS BRN CHL IDN KOR LKA MYS NZL PAK PHL SGP THA VNM	BGD KAZ KGZ KHM IND JPN LAO MYR NPL RUS TJK UZB

이와 같이, 아시아 FTA 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밀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과 아세안 중심의 네트워크를 향해 미국의 네트워크가 중첩되는 구도를 띠었다. 네트워크 중심성의 모든 지표에서 중국의 권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트워크 밀도가 증가할수록 중국의 상대적 입지는 축소되었다. 특히 매개중심성의 경우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달리 네트워크 밀도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독립적인 하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과 싱가포르 등은 미중 네트워크 사이에서 매개자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IV. 한국의 아시아 FTA 전략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아시아의 자유무역은 관세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 WTO라는 글로벌 다자협정 이외에 지역적인 수준에서 다자적인 틀이 결여된 상태에서 양자 FTA를 중심으로 규율되어 왔다. 나아가 아시아 FTA 네트워크는 점차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대 네트워크 간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양자주의에 기반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그 양극화는 한국에게 장차 기회보다는 도전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10년대 한국의 통상외교는 기존의 양자주의를 다자화 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거버넌스 차원에서 FTA 만능론과 망국론을 동시에 극복하고 수출경제의 이득이 다수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분배적인 수출 주도형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양자주의의 다자화 전략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절실하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기존 미국 주도의 아시아 정치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힘의 분포 상태는 2010년 구글(Google) 사태, 대만 무기판매, 달라이 라마 방미, 위안화 절상 문제 등 다방면에서 ‘공세적 중국’(assertive China)을 목도할 기회를 제공했다. 미중 간 능력 격차가 줄어들어 따라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의 막이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김양규 · Stephen Ranger 2011).

그런데, 이러한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는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미국과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복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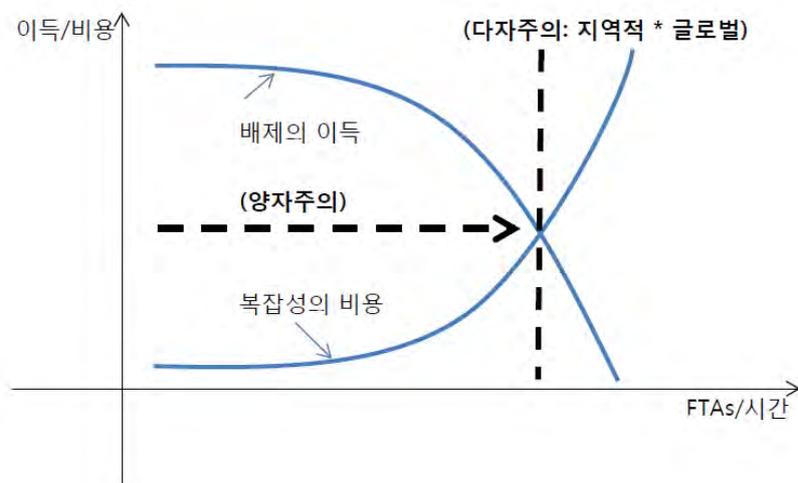
맹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들 가운데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다. 전통적으로 최대 시장은 미국이었으나 2000년 이후 급속히 성장한 중국이 최대의 시장으로 등장했다. 2001년과 2011년 사이에 한국의 대 일본 수출은 11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감소했고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반감되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11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급증했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한국에게 중국의 무게감은 한층 커진다.

따라서 만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 대립이 첨예화 될 경우 한국은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무역정치에서도 FTA 네트워크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극화되고, 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은 양자택일이라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진퇴양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으로 이 논문은 양자 FTA의 다자화를 주문한다.

여기서 논점은 아시아 지역주의 대 글로벌 다자주의라기보다는 아시아 안에서 양자주의 대 다자주의의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아시아 국가들이 FTA나 지역협정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그것이 WTO 체제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에 관심을 둔다. 반면 후자는 양자 혹은 복수국간 FTA 협정에 기반한 무역레짐과 단일한 지역협정을 통한 무역 거버넌스 간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에 주목한다.

흔히 양자적인 무역레짐의 장점으로 동류국가 간에 맞춤형 자유화가 가능하고, 협상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높고, 지정학적인 관계와 전략적인 동맹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그림 4]와 같이, 양자 FTA의 수가 늘수록 배제에 따른 특혜적 이득은 줄고, 대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한 거래 및 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비용과 이득이 교차하는 단계, 즉 소위 ‘스파게티 보울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양자주의보다는 다자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이롭다(Bhagwati 1995; Bhagwati 2008; Baldwin 2006, 1451-1518). 더구나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틈에 정치·경제적으로 끼어 있는 한국에게는 불리한 점이 더 많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양자주의는 강대국에게 더 유용한 수단이었다. 양자주의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이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시장 그 자체가 하나의 배타적 재화(excludable good)가 될 수 있고 협상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강대국은 경제동맹으로부터 약소국을 포기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 그러한 위협이 다른 협정들의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위협은 신뢰할 만한 위협이 된다. 강대국은 또한 각 약소국들에게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차별적인 협상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약소국은 이러한 양자 제도에서 별다른 이점을 찾기 어렵다(Weber 1992, 633-680).

[그림 4] 양자주의와 다자주의 편익





예를 들면, 나치 독일은 20세기 초에 비교적 순수한 형태의 양자주의 구성 원리에 입각한 무역질서를 구축했다. 이 체제는 1934년 샤흐트(Hjalmar Schacht)가 고안한 나치 정부의 신계획으로 양자주의 무역 및 결제 시스템이었다. 독일의 대외무역관계의 핵심은 독일이 다른 무역 대상국들과 호혜적인(reciprocal) 협정을 협상하는 것이었다. 이 협상에 따라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고, 그 양과 가격은 얼마인지 결정되었다. 종종 독일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수출보다 수입을 늘리곤 했다. 그렇지만 독일은 가격이 과다 책정된 독일 상품에 대한 구매를 요구하거나 대 독일 재투자 요구로써 결제를 대신했다. 독일의 양자주의는 전형적으로 중유럽과 동유럽, 발칸지역 및 남미의 약소국들에 초점을 맞췄으며, 기본적으로 차별적인 속성을 띠었다(Powers and Goertz 2006; Hearnden 2006, 67-78).

[표 3] 아시아의 주요 FTA 모델(APEC 2008)

조항	미국	일본	중국
원산지	복잡함; 상품별	복잡함; 상품별 및 국가별	현지 부가가치; 일부 상품별(중-칠레 FTA)
상품	포괄적; 민감한 농산물 제외	중대한 예외; 특히 농업	매우 선택적; 여러 가지 예외
서비스	모든 종류의 서비스; 네거티브 리스트	모든 종류의 서비스;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된 범위
발효	즉시; 10 년까지	단계적; 상품별; 10 년 이상	신속적; 모호함
투자	있음;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불허	있음;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불허	“협력”
지적재산권	있음; WTO 플러스	있음; WTO 부합성	권리 소유자와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 간의 균형 언급
노동기준	있음; 국제의무 부합성, 위반 시 처벌	기존 국내법상 보호조치의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 시도 금지만을 언급	없음
환경기준	있음	약함	없음
경쟁정책	있음	있음	없음
정부조달	있음	없음	없음
분쟁해결	있음; 투자자-국가 소송제 포함	있음; 투자자-국가 소송제 포함	합의 당사자
역량강화	없음	있음	있음
WTO 준수	있음	?	없음

어떤 경우에도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FTA 블록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다자협정의 참여국에서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FTA의 내용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식 모델이 기존 WTO협정에서 진일보한 높은 수준의 FTA라면 중국의 FTA 모델은 매우 제한적인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 모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같은 모델 간의 수렴이 없는 상태에서 양자 FTA의 확산은 상이한 네트워크 또는 블록 간의 대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아시아에는



근대 이후 대체로 두 개의 허브 국가가 존재했다. 1990년대까지는 중국과 일본, 2000년대 후반에는 중국과 미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역내에 정치경제적 조정 메커니즘이 없을 경우 아시아의 세력 판도는 양대 허브 시스템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아시아는 지역 협력보다는 지역 분열 양상이 두드러질 우려가 있다.

이미 2차 대전 직전 무역관계가 블록화 되고 정치군사 관계가 진영화 되면서 전간기 유럽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2차 대전 막바지 영국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은 지역과 경제 블록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 세계질서를 구상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 다자주의를 채택했다. 정치적 경쟁은 블록 간에 또 블록 내부에서 발생하고, 블록 간에 보호주의 장벽이 형성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Gordon 2003, 105-118). 미국 루스벨트(F.D. Roosevelt) 행정부는 전후 세계질서가 지역에 의존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 경제, 정치, 군사적 차이점이 점차 커져서 지역 및 블록 간의 경제적, 군사적 대립이 증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는 따라서 될수록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협정이 세계무역과 상업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은 다자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가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외국과의 양자 협상이라는 전통적인 전략에 입각하여 무조건적이고 비차별적인 원칙에 기초한 상호 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했다(Hearden 2006, 67-78).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은 2010년대 미국 FTA 네트워크와 중국 FTA 네트워크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는 아시아 무역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바로 양자 FTA 네트워크가 양극화 내지 블록화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면서 기존 양자 FTA의 다자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일종의 양자적 다자주의로서 기존의 양자 FTA를 다자화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형식상의 다자주의(de jure multilateralism)로서 여러 FTA를 새로운 단일 무역협정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기존 FTA의 공통분모만을 추리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단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자협정은 양자협정의 공통점을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Downs, Rocke and Barsboom 1996, 379-406), 새로운 협정에 입각한 무역자유화는 후퇴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세 가지의 단일 협정안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다. 중국은 아세안을 모태로 한중일을 엮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 EAFTA), 일본은 EAFTA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더하는 동아시아포괄경제파트너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CEPEA)를 각각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TPP를 발판으로 아태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Region: FTAAP)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세안+3 국가들은 EAFTA와 CEPEA 중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두 방안을 함께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다른 다자화 경로로는 기존 FTA의 밀도와 유사성을 증가시켜 양자협정의 다자화를 꾀하는 사실상의 다자주의(de facto multilateralism)가 있다. 여러 개의 FTA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내용이 유사하여 마치 단일한 다자협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경우다. 이 시나리오는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이 FTA 네트워크에 포섭되고, 이들의 FTA 간에 수렴이 촉진될 때 성사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FTA에는 정기적인 검토(review)와 개정(revision)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 여하에 따라서는 FTA의 발효 이후에도 규범적인 조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상의 다자주의의 관건은 수렴의 지향점, 즉 어느 FTA 모델을 표준으로 삼느냐다. 아시아 FTA 모델로는 미국식, 일본식, 그리고 중국식 모델 등이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와 글로벌 다자 무역체제의 유용성에 비춰 ‘WTO 플러스’(plus)형 FTA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존의 WTO 무역협정에서 합의된 그 이상의 내용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양자협정은 다자협정보다 더 구속력이 강하고 강력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자협정은 사실상 양자협정의 하위협정이 된다.



[표 4] 세계 주요 국가의 무역의존도

Import/GDP								Export/GDP							
Country	2007	2008	2009	2010	2011	Average	Rank	Country	2007	2008	2009	2010	2011	Average	
Hong Kong	177.53	180.39	165.93	193.20	198.78	183.17	1	Hong Kong	166.36	168.40	152.17	174.03	176.21	167.44	
Singapore	147.96	167.76	131.96	136.51	140.64	144.96	2	Singapore	168.36	177.39	144.85	154.45	157.49	160.51	
Netherlands	53.61	56.48	47.95	56.48	60.41	54.99	3	Netherlands	60.68	61.78	54.15	63.10	67.02	61.35	
<b>Korea</b>	<b>34.01</b>	<b>46.73</b>	<b>38.71</b>	<b>41.91</b>	<b>40.34</b>		<b>4</b>	<b>Saudi Arabia</b>	<b>60.61</b>	<b>65.80</b>	<b>51.05</b>	<b>55.71</b>		<b>58.29</b>	
Switzerland	35.23	34.29	29.91	31.55	..	32.74	5	<b>Korea</b>	<b>35.41</b>	<b>45.31</b>	<b>43.36</b>	<b>45.97</b>		<b>42.51</b>	
Germany	31.66	32.62	28.01	32.25	35.13	31.93	6	Germany	39.69	39.83	33.86	38.51	41.30	38.64	
South Africa	30.91	36.52	25.88	25.84	29.79	29.79	7	Switzerland	37.91	37.86	33.70	35.10	..	36.14	
Mexico	28.62	29.45	27.82	30.54	31.85	29.66	8	China	34.85	31.52	23.71	26.52	26.36	28.59	
Canada	27.20	27.65	24.56	24.80	26.03	26.05	9	Mexico	26.26	26.43	25.96	28.77	30.23	27.53	
Turkey	26.28	27.65	22.93	25.26	..	25.53	10	Canada	29.15	29.89	23.39	24.51	26.01	26.59	
China	27.37	24.97	19.81	23.46	24.18	23.96	11	Russia	27.58	27.99	24.33	26.39	..	26.57	
France	24.39	25.14	21.25	23.66	25.25	23.94	12	Indonesia	27.30	27.36	22.17	22.33	23.79	24.59	
United Kingdom	22.05	24.07	22.24	24.81	26.33	23.90	13	South Africa	24.34	30.44	21.83	22.40	23.74	24.55	
Spain	26.63	25.95	19.89	22.65	24.30	23.88	14	Italy	23.46	23.43	19.20	21.74	23.77	22.32	
Italy	23.94	24.26	19.59	23.67	25.31	23.35	15	France	21.27	21.38	18.07	20.13	20.93	20.36	
Saudi Arabia	23.44	24.17	25.36	23.71	19.37	23.21	16	Argentina	21.26	21.47	18.18	17.49	18.82	19.45	
India	18.92	24.76	19.20	20.85	23.43	21.43	17	United Kingdom	15.45	17.58	16.33	18.13	19.85	17.47	
Indonesia	21.54	25.00	17.38	19.11	20.83	20.77	18	Spain	17.23	17.30	15.10	17.67	19.98	17.46	
Australia	17.45	19.18	16.66	16.18	16.38	17.17	19	Australia	14.90	18.03	15.64	17.04	18.24	16.77	
Euro Area	16.79	16.73	14.16	15.70	16.66	16.01	20	Turkey	16.58	18.08	16.62	15.51	..	16.70	
United States	14.40	15.18	11.52	13.55	15.01	13.93	21	Euro Area	17.24	17.19	14.60	16.22	17.20	16.49	
Argentina	17.47	15.65	13.51	10.79	9.82	13.45	22	Japan	16.28	16.06	11.50	14.06	..	14.48	
Japan	14.13	15.65	10.91	12.65	..	13.34	23	India	12.41	14.94	12.34	13.08	15.58	13.67	
Brazil	9.27	11.03	8.25	8.93	8.65	9.23	24	Brazil	11.75	11.97	9.44	9.42	10.45	10.61	
Russia	..	..	..	..	..	..	25	United States	8.29	9.10	7.58	8.79	9.81	8.72	

출처 : Principal Global Indicators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을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2011년의 무역의존도, 즉 GDP 대비 무역액 비율은 96.9퍼센트로 과거 최고치인 2008년 92.1퍼센트보다 4.8퍼센트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한 무역의존도는 2008년에 110.7퍼센트를 기록한 후 2009년에는 98.8퍼센트로 잠시 떨어졌다가 2010년에는 105.2퍼센트, 2011년에 113.2퍼센트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다.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4]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수출입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2007-2011년 5년 동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수입의존도는 40.34퍼센트로 세계 4위, 수출의존도는 42.51퍼센트로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두세 배를 넘는다. 이것은 한편으로 한국 경제가 대외 여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때문에 과도한 대외의존도에 따른 국내 경제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내수 산업을 활성화시켜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를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선진국들이 경기하강 국면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보호주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은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글로벌 무역질서의 개방성을 필요로 한다. 주요 선진 및 거대 경제가 보호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제적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재균형(growth-rebalancing) 전략의 일환으로 수출의존도 완화, 내수 확대, 소비자 복지 강조 등 소위 ‘은밀한 보호주의’(murky protectionism)가 고개를 들고 있어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 점에서 자유무역은 양자적, 지역적 또는 글로벌 수준에서 독립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추구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면서 중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sup>9</sup> 뿐만 아니라 WTO 도하개발라운드(Doha Development Agenda: DDA)가 단기간에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 환경, 투자, 농산물 등 현존 WTO 체제 틀 안에서 포괄되지 못한 통상이슈를 양자 및 지역 FTA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현재 농산물의 경우, 아시아 FTA의 21퍼센트는 매우 제한적으로 포함시키거나 아예 제외하고 있다. 하



지만 투자·경쟁정책·정부조달·무역원활화 등 소위 ‘싱가포르이슈’의 경우, 일본이 체결한 11개 FTA 모두, 싱가포르의 20개 중 19개, 그리고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의 FTA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sup>10</sup> 다만, 중국과 인도는 전통적으로 상품·서비스 부문의 협정을 선호해왔지만, 인도-싱가포르, 중국-뉴질랜드 FTA에서는 WTO 플러스 이슈가 도입되었다. 적어도 농산물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이미 WTO 플러스 요소가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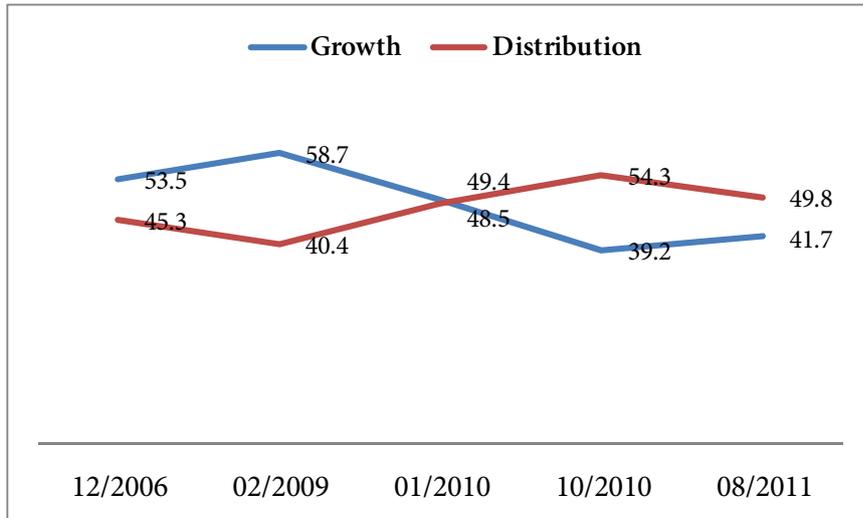
한국은 이미 G20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무역장벽의 도입을 자제하는 이른바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제안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맡은 경험이 있다(G20 2008).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질량(mass) 외교보다는 지식 외교를 추구하기에 적합하다. 실제로 2011년 11월 23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세계경제의 동조화 강화와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한 각 나라의 탄성치는 선진국이 0.99, 신흥국이 0.85로 조사됐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1퍼센트 성장하거나 하락할 때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은 각각 0.99퍼센트, 0.85퍼센트 성장하거나 하락한다는 의미다. 한국은 0.76으로 다른 아시아 신흥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 비해 낮았다. 중국은 0.5에 그쳤다. 선진국 가운데는 일본(1.32)과 독일(1.12), 영국(0.98), 유로존(0.96), 미국(0.95) 차례였다 (<한겨레> 2011/11/23). 선진국들은 대외적 의존도가 한국보다 낮지만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민감성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적어도 일본과 미국을 엮어낼 근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요컨대, 양자적 다자주의 원칙 하에서 한국 정부는 쌍무적 무역자유화 수단인 FTA, 지역적 다자 틀인 APEC, 그리고 글로벌 다자주의인 WTO 등 3차원 통상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자주의와 다자주의가 상호보완적이며 중층적으로 병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형식상 또는 사실상의 다자 레짐을 지향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은 양자 FTA에 WTO 플러스 요소를 도입하면서 동아시아(EAFTA, CEPEA)와 태평양(TPP)을 포괄하는 APEC을 중심으로 지역적 다자협정을 도출하고, 이를 WTO체제에 내재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외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 국내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이 아시아 FTA 게임을 대할 때 필요한 자세는 FTA 만능론이나 FTA 망국론이 아닌 FTA 활용론일 것이다. 우선 FTA 만능론은 개방경제의 효율성과 성장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분배와 양극화의 측면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FTA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시장 선점과 수출 증대 등 선행주자의 이점을 강조하는 주장도 FTA의 효과에 대한 과대 해석이다. FTA는 군사동맹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학적, 전략적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다. 만능론은 또한 한국이 과거 독일이나 지금의 미국처럼 막강한 시장력을 바탕으로 양자 FTA와 다자협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눈감고 있다. 국제정치경제사는 양자주의 하에서 FTA는 한국과 같은 비강대국보다는 강대국에게 이로운 수단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림 5] 최우선 국정 아젠다 선호도



출처: <EAI 여론 브리핑> 101호

한편, FTA 망국론은 한국이 세계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주변부가 아닌 반주변부에 속해 있다는 점을 외면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한국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의 피해자(약자)이지만 후진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의 수혜자(강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FTA나 양자투자협정(BIT)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ISD) 조항은 한국에게 독소조항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SD 규정은 한-미 관계처럼 자본주의 중심부에 대해서는 독이 될지 모르지만 한-아세안 관계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는 약이 될 수 있다.

이 두 입장은 국내 정치과정에서 당파적인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기제로 제기되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2012년 4월 현재 8개의 FTA를 발효했고, 8개 FTA가 협상 중에 있으며, 11개는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단계에 있다(외교통상부 2012). 그런데 이 중에서 국내정치에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한-미 FTA뿐이다. 이는 FTA 논의가 통상외교 전반에 대한 숙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한미관계에 대한 논쟁, 즉 친미 대 반미 구도의 일부분으로 변질되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FTA와 자유무역의 유용성 여부는 양면게임(two-level game) 중에서 다른 국가와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이익의 균형을 맞추느냐에 의해서도 좌우되지만, 동시에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FTA의 궁극적인 효용성은 GDP, 경제성장률, 1인당 소득 같은 국민경제의 종합지표 이외에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정도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다. 자유무역은 성장과 분배 간의 조화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한다는 점에서 FTA는 국내 경제정책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다. 기존의 맹목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수출주도형이 아니라 수출의 분배적 측면을 감안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림 5]는 한국 국민들의 과반수가 성장보다는 분배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출 증가에 의한 성장의 과실이 무역자유화의 승자는 물론 패자와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지도록 해야 한다. 수출 대기업이나 수입 업체 등 일부 국내집단이 자유무역의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유통구조, 조세제도, 복지제도 등이 개편되어야 한다.

OECD에 따르면(OECD 2011), 지구화(globalization)가 반드시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무역 개방성과 소득 불균형 간의 관계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개방성이 소득불균형의 가능성을 높이는 했지만 소득증가의 기회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불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마다 상이한 규제나 제도 등이었다. 세금과 재정을 통한 소득이전, 시장의 경쟁 촉진, 임금결정구조 등



노동시장 정책의 영향이 컸다. 그런데, 한국은 재분배 정책을 통한 소득이전의 규모가 매우 낮다. 정부가 세금과 재정을 통해 기존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준은 7퍼센트에 불과해 칠레 다음으로 가장 낮았으며, OECD 평균인 25퍼센트에 턱없이 미달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FTA 대책은 시장의 경쟁성 강화 방안 및 재분배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사회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를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중심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은 중단기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국내의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이하 계층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 등에 대한 재분배를 통해 국내 수요기반을 넓혀야 한다.

## V. 결론

2010년대 아시아의 무역 거버넌스는 FTA 네트워크에 의해 규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은 대외적으로는 양자 FTA를 다자주의 레짐으로 발전시키는 양자적 다자주의 접근법을 견지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자유무역의 이익이 국민 대다수에 의해서 공유되도록 국내 경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시아는 1990년대 경제적 기적과 좌절을 한꺼번에 맞보았다. 그런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또 다시 아시아의 세기가 열리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게 대두했다. 국제정치에서 아시아의 복귀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능력의 재편과 양자관계는 향후 아시아 무역질서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후 다자주의 무역질서 하에서 글로벌 공장으로 발돋움했지만, 유럽이나 북미와는 달리 역내 다자 무역협정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신 중첩적인 양자 FTA가 아시아 무역질서와 각국의 통상 정책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부상했다. 그런데 글로벌 차원에서 세력전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아시아 무역정치에도 미중관계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FTA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적인 영향권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미국은 그동안 아시아 FTA 정치에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오바마 행정부 들어 TPP를 매개로 적극적인 대 아시아 재개입 정책으로 선회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FTA 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필요한 FTA 정책은 국내적으로 기존의 성장 일변도의 거버넌스의 개편이 전제된 양자적 다자주의라고 본다. 아시아 FTA 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밀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과 아세안 중심의 네트워크를 향해 미국의 네트워크가 진입해오는 구도를 띠고 있다. 네트워크 중심성의 모든 지표에서 중국의 권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트워크 밀도가 증가할수록 중국의 상대적 입지는 축소되었다. 특히 매개중심성의 경우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달리 네트워크 밀도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독립적인 하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과 싱가포르 등은 미중 네트워크 사이에서 매개자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런데 양자주의에 기반한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양극화는 한국에게 기회보다는 도전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10년대 한국의 통상외교는 기존의 양자주의를 다자화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시아 FTA 네트워크 내에서 매개권력을 활용하여 양자 FTA를 형식상 또는 사실상의 다자레



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하는 것이다. 쌍무적 무역자유화 수단인 FTA, 지역적 다자 틀인 APEC, 그리고 글로벌 다자주의인 WTO 등을 동시에 이용하는 3차원 통상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자주의와 다자주의 간의 관계가 대체재보다는 보완재로서 중층적으로 병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궁극적으로 다자 레짐을 지향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자 FTA에 WTO 플러스 요소를 도입하면서 동아시아(EAFTA, CEPEA)와 태평양(TPP)을 포괄하는 APEC을 중심으로 지역적 다자협정을 도출하고, 이를 WTO체제에 내재화하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 차원에서 FTA에 대한 만능론이나 망국론을 지양하고 FTA 활용론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면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국으로서는 자유무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수단에 의지해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느냐, 또 누구의 이익을 위한 자유무역이냐다. 무엇보다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사회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를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중심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은 중단기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국내의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이하 계층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 등에 대한 재분배를 통해 국내 수요기반을 넓혀야 한다.

결론적으로, 2010년대 아시아 FTA 확산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은 대외적으로 양자적 다자주의, 대내적으로 분배 친화적인 경제 거버넌스를 두 수레바퀴로 삼아 구사되는 게 바람직하다.■

## 주(註)

<sup>1</sup> 외교통상부는 2012년 2월8일 한중 FTA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알리는 공지문을 9일자로 관보에 올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청회의 관보게재 요청은 FTA 추진 과정의 첫 번째 절차다.

<sup>2</sup> 그러나 태국은 한국이 쌀 시장의 개방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sup>3</sup> 미국은 이미 1998년 호주,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FTA 협상을 제안했다. 그 목적은 APEC 내에서 무역자유화의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는데 성공했다(McKinnon 2008).

<sup>4</sup> 기술적으로 이미 체결된 FTA, 협상·연구 중인 FTA, 그리고 논의조차 없는 FTA는 각각 1, 0.5, 0으로 코딩되었다. 한편,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등 복수국간(plurilateral) 협정은 하나의 FTA가 아니라 모든 계약국이 서로 별개의 양자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3개국을 계약국으로 하는 FTA는 모두 3개의 양자 FTA를 가진 것으로 기록된다. 여러 네트워크 지표에 관한 통계 수치는 사회연결망분석 소프트웨어인 UCINET을 사용하여 얻었다.



- <sup>5</sup> 네트워크 밀도는 연결 가능한 전체 링크 중에서 실제로 연결된 링크의 비율이다.
- <sup>6</sup> 클러스터계수는 특정 노드(node)가 인접하고 있는 이웃 노드들 간의 밀도를 말한다. 이 계수 값이 클수록 인접노드와의 응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 <sup>7</sup> 전체 네트워크 크기에서 중복(redundancy) 링크를 뺀 값이다(Burt 1992).
- <sup>8</sup> 네트워크의 하위구조를 식별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Clique, Cutpoint, Faction 등의 기법이 있다.
- <sup>9</sup> 다양한 국제 제도와 협정 간 중첩성(nestedness)에 대한 개념은 Aggarwal(1998) 참고.
- <sup>10</sup> 싱가포르 이슈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한 ① 무역과 해외투자, ② 무역과 경쟁정책, ③ 정부조달 투명성, ④ 무역원활화 등을 말한다(Searight 2009).



## 참고문헌

---

- 김상배. 2011.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국가전략> 17, 1: 5-40.
- 김양규 · Stephen Ranger. 2011. “미중관계 시리즈 개요.” 동아시아연구원(EAI), 5월 4일.  
[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107051635738.pdf](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107051635738.pdf) (검색일: 2012.4.5).
- 김치욱. 2012. “네트워크 이론으로 본 미-중 자유무역협정(FTA) 경쟁.” <국제정치논총> 52, 1: 161-190.
- 손열. 2011. “위기이후 동아시아 다자경제체도의 건축 경쟁: 경제적 상호의존, 네트워크 효과, 안보이익.” <국가전략> 17, 1: 39-65.
- 외교통상부. 2012. “한국의 FTA 추진현황.”  
<http://www.fta.go.kr/new/ftakorea/ftakorea2010.asp> (검색일: 2012.4.1)
- Asian Development Bank. 2010. *Institutions for Regional Integration: Towards an Asian Economic Community*.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 Aggarwal, Vinod K. ed. 1998. *Institutional Designs for a Complex World: Bargaining, Linking, and Nesting*.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and Shujiro Urata. 2006. *Bilateral Trade Agreements in the Asia-Pacific: Origins, Evolution, and Im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 APEC. 2008. “Identify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Forum Doc. No. 2008/CSOM/016rev1.
- \_\_\_\_\_. 2011. “The Honolulu Declaration: Toward a Seamless Regional Economy.” 19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Honolulu, USA, November 12-13.
- Baldwin, Richard. 2006. “Multilateralizing Regionalism: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k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The World Economy* 29, 11: 1451-1518.
- \_\_\_\_\_ and Patrick Low. ed. 2009. *Multilateralizing Regio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hagwati, Jagdish. 1995. *U.S. Trade Policy: The Infatuation with Free Trade Agreemen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The Capital Myth.” *Foreign Affairs* 77, 3: 7-12.
- \_\_\_\_\_. 2008. *Termites in the Trading System: How Preferential Agreements Undermine Free Tra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wring, Philip. 2011. “What Asian Century?” *New York Times*, May 17.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linton, Hillary Rodham. 2011.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Magazine*, October 11.
- Deng, Yong. 1997. “Chinese Relations with Japan: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Regionalism.” *Pacific Affairs* 70, 3: 373-391.
- Dent, Christopher M. 2010. “Free Trade Agreements in the Asia-Pacific a Decade on: Evaluating the Past, Looking to the Futur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0, 2: 201-245.
- Downs, George W., David M. Rocke, and Peter N. Barsoom. 1996. “Is the Good News about Compliance Good News about Coop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0, 3: 379-406.



- G20. 2008. "Declaration of the 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 Washington DC, November 15.
- Gordon, Bernard K. 2003. "A High-Risk Trade Policy." *Foreign Affairs* 82, 4: 105-118.
- Grewal, David Singh.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earden, Patrick J. 2006. "Early American Views Regarding European Unification."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19, 1: 67-78.
- Heydon, Kenneth and Stephen Woolcock. 2009. *The Rise of Bilateralism: Comparing American, European and Asian Approaches to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New York: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Kohli, Harinder S., Ashok Sharma, and Anil Sood. eds. 2011. *Asia 2050: Realizing the Asian Centu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ojima, Kiyoshi. 1971. "A Pacific Free Trade Area: A New Design for World Trade Expansion."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12, 1: 1-9.
- Krugman, Paul. 1994. "The Myth of East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73, 6: 62-78.
- Lewis, Meredith Kolsky. 2011.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w Paradigm or Wolf in Sheep's Clothing?"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34, 1: 27-52.
- McKinnon, John D. 2008. "Bush Pushes Trans-Pacific Free Trade."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24, 2008.
- Morin, Jean-Frederic. 2009. "Multilateralizing TRIPs-Plus Agreements: Is the US Strategy a Failure?" *The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12, 3: 175-197.
- OECD. 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Paris: OECD.
- Searight, Amy. 2009. "Emerging Economic Architecture in Asia: Opening or Insulating the Region?" In Michael J. Green and Bates Gill. ed. *Asia's New Multilateralism: Cooperation, Competition, and the Search for Commun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eber, Steve. 1992. "Shaping the Postwar Balance of Power: Multilateralism in NA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3: 633-680.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필자약력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김치욱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연구 분야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네트워크 세계정치, 중견국가론이며, 최근의 주요 논저로는 “케인스주의의 부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치엘리트의 경제담론 분석”, “네트워크 이론으로 본 미-중 자유무역협정(FTA) 경쟁”,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거버넌스 변화”, “Toward a Multistakeholder Model of Foreign Policy Making in Korea? Big Business and Korea-US Relations” 등이 있다.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 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mailto:hjkim@eai.or.kr)  
김양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mailto:ygkim@eai.or.kr)

